

기아차지부 4·24 총파업 지침 발표! 현대차 집행부도 신속히 총파업 지침을 내려야 한다

현대차 이경훈 집행부가 최근 4·24 총파업의 “목표가 불분명하다”며 “노사정위도 깨진 상황”에서 “무조건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여러 대의원대표, 감사위원 등이 어제(20일) 확대운영위 간담회에서 파업 동참을 촉구하고,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금속노조 위원장이 이 자리에 동석해 파업을 설득했다. 그런데도 지부장은 확대운영위를 재소집해 논의하겠다고 결정을 미뤄 버렸다.

그러나 지금은 4·24 파업에 대한 별도의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이미 민주노총 총파업은 높은 지지로 가결됐다. 민주노총 조합원 65.11퍼센트가 투표에 동참해 84.35퍼센트가 찬성표를 던졌다. 전체 조합원 대비 과반이 훌쩍 넘는다. 현대차만 보더라도,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파업을 지지했다.

금속노조는 15일 ‘전 조합원 주야 4시간 이상 파업에 돌입한다’고 지침을 발표했다. 기아차지부도 20일 주야 4시간 파업과 총파업 집회 참가 지침을 내렸다.

속도전에 나선 박근혜

무엇보다 지금 노사정위가 결렬됐다고 박근혜의 공격이 물 건너간 것이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임금체계 개악과 손쉬운 해고에 속도전을 내겠다고 밝혔다. 5월 중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악을, 6~7월 중 해고요건 완화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5월부터 본격화하는 임단협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몽구 같은 기업주들의 공격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이 같은 공격을 법 개악이 아니라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사업장 별로 임단협에서 대응하는 식으로 투쟁을 분산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통상임금 투쟁은 그 한계를 보여 줬다. 정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통상임금 지도지침, 임금체계 가이드라인 등으로 공격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동안, 민주노총은 정부 정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사업장별 대응으로 방치했다.

이 속에서 노조가 없는 곳에서 먼저 취업규칙 개악이 잇따랐고, 한국노총 사업장들은 총액임금을 늘리지 않는 선에서 타협했다. 한전 부지 매각 등으로 기회가 왔을 때조차 투쟁을 제한한 현대·기아차지부는 결국 올해까지 협상을 연기시키며 스스로 어려움을 초래했고, 이는 계열사들과 동종업계 부품사들에게 악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정에 맞

서 다른 부문의 노동자들과 함께 앞장서 싸워야 한다.

성완중 게이트

게다가 박근혜는 전환배치·정리해고에 대한 노조 합의, 유일단체교섭권, 조합원 가족 우선채용 등 단체협약까지 문제 삼으며 칼을 빼 들었다.

정부는 특히 조합원 자녀 특혜 조항을 문제 삼아 “사법 처리” 등을 예고했다. 이 조항을 약한 고리로 보고 공격을 시작해, 단협을 무력화시키고 노조를 탄압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정규직·비정규직 단결을 위한 방안은 노조 내부의 자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해결할 문제지 정부가 알기불가할 문제가 아니다.

지금 박근혜는 성완중 게이트로 심각한 위기에 몰렸다. 이 때문에 정부의 공격이 늦춰질 거라는 기대도 나온다.

그러나 경계를 풀거나, 투쟁을 미

뤄선 안 된다. 박근혜가 위기에 빠진 지금 투쟁을 더 확실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적에게 숨 쉴 틈을 주면 오히려 우리 편에 위기가 찾아오는 법이다.

부정부패와 세월호 진실 외면 등으로 박근혜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세월호 범국민대회에서 유가족과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의 물대포, 차단벽을 뚫고 대규모 행진을 벌이며 정부에 대한 분노와 투지를 보여 줬다. 민주노총은 4·24 파업의 요구로 세월호 진실 규명을 채택했고, 세월호 유가족들은 4·24 파업을 지지했다.

이럴 때 우리가 파업으로 정부를 몰아세워야 한다. 그러면 광범한 지지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사측과의 투쟁도 유리한 조건에서 시작할 수 있다.

현대차지부는 당장 4·24 총파업 지침을 내려야 한다.

기아차지부는 4·24 총파업 집회에 조합원들을 적극 참가시켜, 수도권 집회에 최대한 많은 노동자들이 결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연대

구입하고 정기구독·후원해 주세요

대표전화 02-777-2792 | 기사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 이메일 ws@wspaper.org
※ 웹사이트에서도 구독신청이 가능합니다.

wspaper.org

<노동자 연대>를 함께 읽고 토론합시다!
문의 : 김우용 (기아차 010-3092-9003)
정동석 (현대차 010-8363-5695)



정몽구·정의선 주식 자산만 7조 3천억! 통상임금 확대하라! 임금체계 개악 말라!

현대·기아차 사측은 최근에도 “임금 경쟁력”이 글로벌 시장의 “필수 생존 전략”이라며 거듭 통상임금-임금체계 개악 의지를 드러냈다.

올해 3월 31일까지 통상임금 합의를 하겠다는 약속도 쓰레기통에 처박아 놓고는, 직무성과급제 도입으로 우리의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경총은 이 같은 “선도적” 임금체계 개악 시도를 칭찬하며, 한국 기업들의 임금이 도요타·폭스바겐 등과 비교해 “글로벌 경쟁력”이 없다고 했다. 우리의 임금을 더 낮추라는 주문이다.

이들은 현대·기아차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다며, 공격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지난해 정몽구와 정의선의 상장주식 보유액만 무려 7조 3천억 원이나 됐다. 게다가 사측은 올해 주주 배당을 두 배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22퍼센트까지 늘리기로 했다(현재 6.2퍼센트). 올 한해 정몽구가 챙길 액수만 3백41억 원이 넘는다.

정부와 기성 언론들은 마치 대공장 정규직 때문에 비정규직이 열악한 처지에 몰리는 듯이 몰아가지만, 우리의 등골을 빼먹은 것은 저들이다.

우리의 요구는 완전히 정당하다. 통상임금 확대, 임금체계 개악 저지를 위해 본격적으로 투쟁의 시동을 걸자.

임개위-노사공동위에서 나와 즉각 투쟁에 돌입하자

최근 현대·기아차지부 집행부는 4월 말까지 쟁의권을 확보해 사측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기아차지부는 24일부터 8+8 정취근무도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결정은 단지 위협에 그쳐서는 안 된다. 뻔뻔스럽게도 통상임금 확대를 못하겠다는 사측에 맞서 즉각 투쟁에 돌입해야 한다.

그런데 이경훈 집행부는 임금체계 개선위원회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협상을] 지속”하겠다고 하며, 임금체계개선위 해체와 즉각적 투쟁을 요구한 대의원들의 주장을 묵살해 버렸다. 지부장은 14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독단으로 “만장일치”를 선언해 버렸다. 최소한의 노동조합 민주주의조차 공개버린 것이다.

김종석 집행부는 21일까지 노사공동위에서 “최대한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며, 이 때까지 합의가 이

뤄지지 않으면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악안을 강요하는 사측과의 협상 자리에서 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 박근혜 정부가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사측을 지원하는 마당에, 우리의 힘을 보여 주지 않는 한 사측은 순순히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현대·기아차지부 집행부는 즉시 임금체계개선위-노사공동위에서 나와 투쟁에 매진해야 한다.

알리바이

그룹사 차원의 연대가 투쟁을 치밀피일 늦추거나 회피하는 알리바이가 돼서도 안 된다.

현대·기아차지부 집행부는 그룹사 연대회의 차원에서 공동 교섭과 공동 투쟁으로 사측에 맞서겠다고 했다.

그런데 많은 조합원들이 지난 경험을 떠올리며, 집행부의 계획에 의문

을 던지고 있다. 지난해 통상임금 투쟁 때 두 집행부가 서로를 핑계 대며 투쟁을 제한하고, 이경훈 집행부가 올해 3월 말까지 합의를 연기시켜주며 투쟁을 마비시켰기 때문이다.

김종석 집행부도 법적으로 좋은 조건을 활용해 투쟁을 발전시키기보다, 현대차의 뒤를 따랐다. 기아차지부는 얼마든지 독자적으로 싸워 성과를 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말이다.

올해는 이런 오류를 반복해선 안 된다. 현대·기아차 집행부는 독자적 계획을 내놓고 투쟁을 전진시켜야 한다. 연대는 서로의 힘을 끌어올리는 수단이 돼야지, 그 역이 돼선 안 된다.

기아차지부 집행부는 계획한 잔업 거부 투쟁을 시작하며, 이에 머물지 말고 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전면파업을 결의하고 대차게 싸워야 사측의 개악안을 폐기시키고 요구를 따낼 수 있을 것이다.

UPH-UP에 반대해야 한다

최근 현대차 집행부가 8+8 시행 관련, 사측의 개악안보다 UPH-UP을 더 하는 안을 제시해 현장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기아차 사측은 “현대차 노조가 생산량 만회방안을 제시했다”며 기아차지부에게도 양보를 압박하고 있다.

이경훈 집행부의 양보안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사측의 생산량 보전 압박을 수용하면, 이 같은 양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생산량 보전을 전제하고 있는 기아차지부 집행부도 비슷한 위험에 놓일 수 있다. 임금·노동조건 후퇴 없는 8+8 요구가 중요한 이유다.

사내하청·촉탁직 투쟁에 연대를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신규채용 반대,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투쟁을 시작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쟁의 찬반투표를 하고 투쟁을 시작한다. 기아차 사내하청분회도 4월 24일 한남동 정몽구 자택 앞 집회 등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현대차 촉탁직 계약해지자 박점환 동지는 용기 있게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이 투쟁에 관심을 갖고 적극 연대하자.

기아차 사측의 현장통제 규탄한다

기아차 사측이 어제(20일)부터 조기퇴근을 단속하고, 적발 시 근태 처리하겠다고 협박했다.

사측은 “근무시간을 지키자”는 것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현장 조합원들을 통제하고 옥죄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현대차 전주공장에서조차 사측은 똑같은 일을 벌였다.

조기퇴근 단속 첫날 화성지회 집행부는 사측의 단속 시도에 항의하며 잘 막아 냈다. 항의를 지속·확대해 사측의 시도를 좌절시키자.